

# 5.24조치 해제와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562
------	-----

2015. 6. 30.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16일, 오경환의원외 22명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7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15. 6. 30)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오경환 의원)

가. 주문

- 남북대화를 통해 각종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5.24조치 해제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함.

## 나. 제안이유

- 올해가 분단 70년, 광복 70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지만 정작 남북관계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실정임.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마저 중단될 경우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완전히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비전은 평화와 번영이 보장된 통일로 가는 길인 바, 그 시작은 남북경제협력에 있으며 남북관계의 큰 틀 속에서의 해법은 성의 있는 노력과 변함없는 지속성임을 우리는 수많은 분단역사의 경험 속에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임.
- 70년의 분단역사로 인해 남북의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이 대단히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하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적 시도를 해 나아가야 할 시기임.
- 현재 남과 북은 5.24 조치로 서로 꿈쩍도 못하는 제2의 3.8선에 직면해 있음. 국민의 생존권과 국익, 민족의 미래 비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하는 당위성도 중요하나, 대한민국의 실제적 미래비전의 토대인“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선 예외사항으로 과감히 풀어 시급히 민족의 비전을 열어나가야 할 것임.
- 또한, 민족화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인도적 지원,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종교, 학술, 체육의 문화교류 등도 민간차원의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활발히 펼쳐 나가는 것이 지혜로 해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통일은 힘찬 남북경제협력으로부터 시작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5.24조치 해제와 조건 없는 당국 간 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다. 이송처 : 국회, 통일부, 서울특별시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가. 결의안의 개요

- 결의안은 남북간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 5.24조치의 조속한 해제를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 서울시 등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 나. 5.24조치와 남북교류 중단

-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해에서 일어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24일 정부는 이른바 5.24조치로 불리는 대북 제재조치를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형식으로 발표하였음.
- 당시 발표된 5.24대북 조치의 주요내용은 1)제주해협을 포함한

우리측 해역에 대한 북한선박의 운항과 입항 금지 2)위탁가공교역을 포함한 모든 물품의 반출·반입 금지 3)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주민과의 접촉제한 4)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와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5)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으로 이 조치에 따라 사전에 정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상 모든 교류가 중단되었음.

- 상당기간 경색관계에 있던 남북 관계는 지난 2013년 8월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 발표와 2013년 10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2014년 1월 ‘통일대박론’, 그리고 2014년 3월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발표를 계기로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
-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의 핵심은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과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하지만,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이한 현재까지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해 5.24조치 해제와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상당기간 긴장관계에 있던 남북은 지난 6월 15일 북한이 정부 성명을 통해 한미군사훈련중단과 5.24조치 해제 등 당국간 조건부

대화를 제안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남북 대화 재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

-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6.15 공동선언 15주년과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 통일국가 기반구축을 위한 다양한 요구와 노력들이 반복되면서 5.24조치 해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 요구와 기대가 증가하고 있음.

#### 다. 5.24조치 해제와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의 의미

- 5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5.24조치와 이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최근 이와 같은 상황 타개를 위한 다각적인 요구들이 급증하고 있음.
- 지난 3월부터 5.24조치 해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경실련통일협회에 따르면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남한의 피해가 15조 8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경협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107개 경협기업 가운데 100개(93.5%) 경협 기업이 경영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밝힘<sup>1)</sup>.
- 또한, 2007년 55회에 이르던 남북간 회담은 2011년 1회에 그쳤고, 2012년에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남북장관급 회담 역시 7년 넘게 중단되었을 만큼 남북관계 전반의 상황이 심각히 악화되었음.

---

1)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5월 21일 cbs와의 인터뷰를 통해 “5.24조치 이후 지속된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결국 개성공단 운영에도 큰 타격을 줬다.”고 밝힘.

- 이에 따라 국내외 정치권을 비롯한 기업, 시민사회단체에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다만, 여전히 5.24조치 해제와 관련한 다양한 시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여러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방법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5.24조치의 조속한 해제와 이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황을 고려해 조속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조치들이 요구됨.
- 아울러, 남북교류와 협력 사업에 대한 승인권을 정부가 전속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 5.24조치가 해제될 경우 지난 5년 동안 완전히 단절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교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5.24조치 해제와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 결의문

○ 5.24 조치가 발표된 지 벌써 5년입니다!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신규투자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5.24 조치는 남북간 경제활동을 사실상 동결 시켰습니다.

○ 5.24 조치는 비단 남북 경제활동만이 아니라 남북 당국간 대화, 민간차원의 사회문화 교류, 인도적 차원의 지원조차 가로막는 금기의 선이 되어 왔습니다. 개성공단은 제외되었다고는 하지만 신규투자가 중단되어버린 개성공단은 현상유지도 벅차며, 남북화해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도 언제 열릴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 일개 행정처분 하나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넘어 초법적으로 군림해 온 지난 5년 남북교류는 전면 차단되었으며 악화될 대로 악화된 남북관계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해부터 통일대박을 주장한데 이어 통일준비위 구성, 드레스덴 제안 등 일련의 통일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현실은 정부의 통일구상과는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통일 정강들이 쏟아진다고 한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진심어린 노력과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없다면 한낱 말잔치에 지나지 않음을 현실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정부가 진정 통일대박을 바란다면, 5.24조치부터 철회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심어린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교류가 있어야 협력도 있고 신뢰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5.24조치 5년을 맞아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5.24조치를 하루 빨리 해제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민간의 남북교류를 보장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조건 없는 당국 간 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6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